‘4명 사상’ 광주 주택 붕괴 사고, 허가·감독 없었던 ‘인재’

‘건축물 불균형·하중 불안정’ 따른 붕괴로 추정
허가 없이 리모델링 공사 벌인 것으로 드러나
동구, 조례상 ‘노후 건물’ 점검·전수 조사 안 해
“노후한옥 보수 관련 자격·공사지침 보완해야”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주택 개축(리모델링) 현장 내 붕괴 사고가 건축물 불균형·하중 쏠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건물 골조를 바꾸는 큰 공사를 무허가로 진행하는 데도, 관할 구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동구 계림동 내 노후 목조 단층 한옥 주택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 사고가 건축물 불균형·하중 불안정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8일 합동 감식을 벌여 이 같은 1차 감식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사고 직전 해당 주택의 기둥·지붕 구조물만 남겨놓은 채, 건축물 안정성과 연관된 보조철근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봤다. 낡은 구조물을 철제 ‘H’빔 등의 다른 건축 자재로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을 지지하는 균형이 맞지 않았고, 지붕 기와·흙 등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 내렸다.

또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이 규정한 대규모 주택 보수 행위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정이었지만, 관할구청의 안전 진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14조(건축신고)와 건축법시행령 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따라 시공업체 또는 건축주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기둥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동구에 신고서·구조 안전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해당 주택도 연면적 57㎡로 개축 공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공업체는 허가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관할 행정청인 동구도 조례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지난해 11월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붕괴 사고 직전까지 관련 점검을 하지 않았다.

붕괴 참사가 난 주택은 1973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동구는 조례 제정 이후 4개월간 안전 점검도, 점검 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무허가 공사였다고 해도 동구가 사전 확인을 통해 관련 절차를 고지하고, 지반·내진 설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구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점검까지 하려다 보니 인력이 부족했다. 안전관리 담당 기관 증설을 요청한 상태다. 붕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옥 보수공사가 일정한 자격·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건축한 지 수 십년이 지난 목조 건물은 균열·부식으로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썩은 밑둥 보수 ▲지붕 기와·흙 하중 저감 작업 ▲안전 지지대 설치 등의 예비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 개축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 작업자 4명이 매몰,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현행법상, 구청 허가만 있으면 누구나 한옥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학계에선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시공 주체가 예비 공사조차 없이 주택 개·보수 작업을 도맡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광민 건축사는 “오래된 한옥 건물은 밑둥부식 가능성이 커 붕괴 위험이 늘 있다. 한옥 보수공사 수요는 늘어가는데 공사 자격과 안전 지침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보수 공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적정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건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전문 인력·장비를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보강해야 한다. 촘촘하게 점검 대상을 골라 선정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소규모 단독 주택의 경우 점검 후순위로 밀려난다”며 “방문 점검이 어려운 경우 거주자가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제 구실 못한 3009함 타라니…세월호 유족들 분통

유족 “3009호 승선, 배려부족·유족 두번 죽이는 것”

“침몰 사고 해역서 아이들 구조 못한 3009함에 유가족 보고 타라뇨.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세월호 7주기를 닷새 앞두고 추모식이 열린 1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바다 참사해역에서 진행할 선상추모식을 취소하고 목포 신항만으로 발걸음 돌리게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유가족을 태우고 참사 지점으로 향할 배가 ‘3009함’으로 지정돼서다.

‘3009함’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령부 등을 태우고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함이었다. 하지만 구조에 활용 되지 못해 유족에게 상처로 남은 선박이다.

이날 오전 7시께 전남 목포해경 부두에 도착한 유족 등 58명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준비한 선박이 3009함인 것을 보고 탑승을 거부한 뒤 목포 신항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사고 지점을 찾지 못하고 세월호 앞에 선 유족은 ‘직접(현장) 못 찾아 미안하다’며 고인에 대한 미안함을 거듭 토로했다.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정성욱 진상규명분과위원장은 “2014년도 사고 당시 구조에 사용될 3009함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런 배에 가족을 태우고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라는 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분노했다.

세월호 희생자인 신호성 군(단원고 2학년 6반) 어머니 정부자(54·여)씨는 “매년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찾는데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다. 해경에서 유가족을 배려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추모식은 추모사 낭독·헌화·세월호 둘러보기 순으로 약 30분 간 진행됐다.

유족은 시간이 흘러 곳곳에 녹이 슨 세월호 앞에서 탄식했다.

유족은 헌화에 앞서 잠시 호흡을 골랐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제단 앞에 놓았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을 찾은 유가족들이 세월호 앞에서 추모식을 열고 헌화하고 있다.

헌화를 마친 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는 유족도 보였다.

김해심(54·여)씨는 “(세월호) 녹슬어가는 만큼 내 마음도 문드러진다”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잃은 고통과 흔적은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민정 기자

“포스코·가스공사, 미얀마 군부와 단절하라”

“미얀마 시민 지지·연대 의미로 서명 진행”
“시민서명 5000명 넘겨…기업에 전달할 것”

미얀마 쿠데타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10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얀마지지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지난 6일부터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국영 석유기업(MOGE)과 합작으로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MOGE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서명 캠페인을 통해 포스코·한국가스공사와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한다”면서 “포스코는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유예해야 하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명에 참여해 캠페인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목표 인원 5000명을 넘겼다”며 “해외 단체들과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역시 포스코·한국가스공사와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목표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4월까지 서명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캠페인 종료 후 시민들의 서명을 포스코와 한국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